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기속적으로 징계 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그러나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와 검사장 및 고검장들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들고일 어났다.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우레가 있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란(檢亂)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체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 같다. 결국 정치가 검찰을 내리친 ‘추미에의 난’(秋亂)은 법원과 검찰 감찰위원회에서 제압됐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라며서 윤 총장 복귀 결정을 내렸다. 검찰위는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태가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불통과 침묵은 파멸의 전주곡이다

בל상으로 법과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리처드 E.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에서 대통령의 힘은 설득에서 나온다고 했다. 대통령의 간결하고 명쾌하며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는 설득의 요체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데 “모든 공직자는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아들여 한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검사와의 담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올림이 생기는 법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설득의 적이며, 불통보다 더 나쁘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윤석열 직무 배제 등 현 정부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침묵을 지켜왔다. 근본 이유는 자기부정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 독립이 중요하고 검찰 독립에는 검찰총장 임기 보장이 결정적이다”란 말을 했다. 따라서 윤 총장 해임은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검찰권 독립 및 검찰 개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하튼 대통령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훼손시키고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위기’라는 책을 쓴 크리스 윌리스는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조지 W.부시 대통령까지 16명의 대통령의 통찰력과 결단력을 분석했다. 핵심은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암묵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추 장관의 일탈과 독선은 결국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3년6개월이 경과하면 예외 없이 위기를 맞고 레임덕에 빠졌다. 실패한 대통령의 공통점은 위기인데도 위기인지 모르거나,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는 유아적인 생각과 “자신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허황된 믿음이었다.

현 정권은 경기 침체, 부동산 정책 실패, 추미에의 난 등으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도는 작년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들의 지지도는 링에도 오르지 않은 윤석열 총장에게 역전되기도 했다. 심지어 유권자 절반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 지지 의사가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추미에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 10명 중 6명(59.3%)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금 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는 책임과 용기다. 우리는 평소 대통령제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른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대통령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한국 정치의 비극은 대통령이 중심에만 있고 침묵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대통령 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 설득과 용기는 위기 극복의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다. 불통과 침묵으로는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종식시킬 수 없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오늘날 한국에서 ‘시민’과 ‘국민’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무더위나 추위에도 자신의 억울함과 부도덕을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고 일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수년 전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매일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를 노래하고 ‘국민 주권’을 외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적 권리를 적극 행사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이러한 정치 참여를 가리켜 ‘시민 정치’ ‘시민 권력’이라고 부르며, 촛불 집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보여준 절제와 평화, 높은 사회 의식과 성숙한 토론 문화를 두고 ‘시민 정신’ ‘시민 의식’의 발현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개념은 많은 부분에서 의미를 공유하고 있으나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사실 시민이란 개념은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절대 왕정의 종속에서 자유로운

깨어난 시민으로

의지를 가진 사람의 의미였다. 국민이란 절대 왕정이 붕괴된 이후 선거 등을 통해 대표자가 선출되면서 동일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 국가가 발달했던 이탈리아나 절대 왕정의 역사가 없는 스위스 등에서는 ‘시민 정신’이 발달하지만 이와 달리 강력한 국가가 근대화를 주도했던 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일찍부터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와 권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는 어떤가? 자발성과 참여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보장되는 ‘시민 사회’인가? 아니면 국가에 속해 있는 느낌을 주는 국가의 하위로서의 ‘국민 국가’인가? 원불교 성직자인 나의 화두는 ‘일원주의는 대세계주의’라는 소태산 대종사(박종민 1891~1943)의 개척의 소리, 일심의 소리, 진리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세계 시민권(Cosmopolitan)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세계의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어디서나 적대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권리, 지구에 대한 공동의 권리와 책임 등을 포함했다. 그 가운데 최소한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TV·자동차·반도체·조선·컴퓨터·휴대폰 등 첨단 물품을 수출하는 세계 주요 국가가 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는 현실이 지금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

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개발 논리가 우선인 4대강 개발로, 용산 사태의 외면자로 국민들을 길들이고 자신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무기력한 국가의 국민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되 돌아본다.

우리가 자유를, 인권을, 평화를 나누어 줄 수준이 되었는가?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나라는 장차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서 국가, 사회, 종교에 헌신한 분들을 조상으로 받들고, 민족정기를 높여 드려내고, 민족중흥을 넘어서서 조국을 대흥시키고,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인화단결이 가장 급선무라 하며 이를 외면한 어떠한 주·주장과 명분도 큰 위험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려서 무조건 순응하는 데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곧 세계 시민이라는 깨달음을 시작으로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고, 단일 국가만의 이익을 위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실천의 주체들로 바로 서서 평화 실현의 공공성과 연대성을 실천하는 주인이 되어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은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평등한 주체로 서로 관계 맺으며 공동의 문제를 숙의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국가 주도적 정책이나 혜택에 주권을 내맡기는 수동적 국민이 아닌 평화와 인권, 자유와 같은 본래의 권리를 살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시민 정신을 지닌 깨어난 시민이 필요한 때다.

기고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소멸 지수가 가장 높다.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소멸 지수 0.5 이하)에 해당한다. 소멸 지수가 0.2 이하이어서 조만간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소멸 고위험 지역도 고흥군과 신안군 등 두 군데나 된다. 0.3 이하 지역은 11개이다. 경북에서는 군위군과 의성군이 0.2 이하 지역에 속했고, 그들은 이 위기를 공항 유치로 응전했다.

필자는 전남 지역에서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미래를 바라보며 군 공항 유치에 나설 지도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탈피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군 공항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3000여 명 이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광주시민권익위가 주관한 광주공항 관련 공청회에서 한 교통 전문가는 과거 광주공항 국제선이 용객의 지역별 비율은 광주 40%, 전북 30%, 전남 동부권 20%, 전남 서부권 10%였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무안공항을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군 공항 이전과 미래 광주를 위한 제안

지정한 정부 정책은 소비자의 의사, 교통 전문가의 의견, 관광업계의 의견 등을 무시한 순전히 정치적 논리의 산물이었다.

무안공항이 개통한 지 13년이 지난 올 11월 시민권익위가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광주시민의 43.7%는 군 공항만 옮기고 민간 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놔두라고 했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모두 광주에 놔두라는 응답자 12.2%까지 합하면 광주시민의 55.9%는 민간 공항을 광주에 그대로 두기를 원했다. 물론 광주 시민들 대부분은 광주공항을 폐쇄해도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근 다른 공항을 대안 공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북도민들과 전남 동부권 사람들의 선택지는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전북 새만금 지구에 또 다른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것 아닌가. 한 교통 전문가는 광주공항 폐쇄 정책이 새만금 공항 개발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금 광주 정치권과 광주시민이 힘을 모아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부(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권익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시민의 92.4%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공항 이전을 강행할 경우 광주시의 재정이 파탄 나고, 송정리 이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군공항이전법의 개정과 정부가 주도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민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광주시민 43.7%가 생각한 것처럼 민간 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놔두고 군 공항만 옮길 경우 전체 부지 250

만 평 가운데 민간 공항 터로 70~100만 평 정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 140~180만 평을 팔아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부족한 사업비는 당연히 국방부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2140~180만 평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것 역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250만 평 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할 것이다. 또 하나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해야만 군 공항 부지를 아파트가 아닌, 첨단산업지구나 쾌적한 전원 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공원 면적도 최대한 넓힐 수 있다. 공항을 그대로 유지하면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도 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공항 부지는 주변 영산강과 황룡강 수변 지역과 어울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통 큰 결단이란 민간 공항을 아무 조건 없이 무안으로 옮기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통 큰 결단은 광주와 호남권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민간 공항은 광주에 놔두고 군 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영남권 정치인들은 멀쩡한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9조 원 이상을 들여 거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지 않는가? 2007년 기준 3056억 원을 투입한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해 멀쩡한 광주공항을 폐쇄하겠다는 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은가? 이제라도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참신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면서 큰 그림을 성사시키는 멋진 정치권을 상상해 본다.

※ 이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社說

수능은 끝났지만 이후 방역 더 중요하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 끝났다.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수능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입장에선 고교 3년의 교육 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다르없다. 그런 만큼 건강 관리 등 모든 포커스를 수능에 맞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 교육 당국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 등 모두가 하나가 돼 방역에 초점을 맞춰 수능을 치렀다. 교육 당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수능일인 어제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섰다. 광주시도 수능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을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해 ‘수능 시즌’ 방역에 온 힘을 기울였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수능에 코로나 방역의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제 코로나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수능 이후 방역이 훨씬 중요하다. 거리 두기 실천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수능이 끝나면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긴장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라 방심하기 쉽다. 특히 대학별 고사가 치러지는 오는 22일까지가 수능 이후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응시 허용 기준 등이 대학마다 제각각이라 방역에 허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2일까지를 ‘대학별 평가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험장과 대학 주위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섰다. 광주시도 수능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을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해 ‘수능 시즌’ 방역에 온 힘을 기울였다.

광양제철 잇단 사망 사고 근본 대책 마련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잇단 사고로 인명이 희생되자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됐지만 모두 헛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국급속노동조합은 잇그제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 없이는 포스코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11월 24일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인명 사고가 잇을 만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산소배관 밸브 조작 중 폭발로 3명이 사망했는데 6년이 지난 올해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포스코의 반성도 대책도 없는 자세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코 광양제철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폭발사고로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4km가량 떨어진 광양시청에서도 굉음이 들렸는가 하면, 쇳조각 파편이 이순신대교까지 날아가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이번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1조 원 추가 투자, 안전관리요원 2배 증원 및 비상 안전방재 개선단 운영, 안전기술 대학 설립 등 총 3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광주지방노동조합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해당 업체는 물론 감독 당국도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조사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고 예방 대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번에도야말로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푸스카스 선수의 이름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다. 한국의 첫 경기에서 당대 최강 헝가리를 만나 푸스카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0-9로 대패했다. “푸스카스가 슈팅하면 공이 대포알 같아 거의 안 보일 정도였고 골대에 맞으면 골대가 부르르 떨더라.” 골키퍼 황덕영은 경기 후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헝가리 태생인 푸스카스는 1950년대에 원발 하나로 스페인 레알마드리드를 세계 최고의 팀으로 올려놓았으며, 통산 512골을 기록한 뛰어난 골수이다. 그는 특히 예술적

선수 6명을 제치고 73m 폭풍 질주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다. 영국의 BBC는 “손흥민이 볼 터치 12번으로 버리를 산산조각 냈다. 아름다운 골이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미 2019-2020시즌 EPL 최고의 골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의 골 수상 후보로는 10명이 올랐는데 손흥민은 ‘라보나 힐킥 골’을 성공시킨 수아레스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상자는 FIFA 홈페이지에서 9일까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투표로 최종 3인을 가린 뒤 팬(50%)과 축구 전문가(50%)의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손흥민의 골은 특히 이고 절묘한 골을 많이 넣어 ‘푸스카스의 한 골은 두 골로 쳐주어야 한다’는 찬사가 나왔다. FIFA에서는 푸스카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성공시킨 선수에게 ‘올해의 골(푸스카스상)’을 수여하고 있다.

요즘 푸스카스상이 특히 화제가 된 이유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후보로 올랐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버리와 경기에서 상대

올해의 골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